

서울시 인권위원회 정기회 회의록

회의 개요

- ◆ 일 시 : '23.12.7.(목) 15:30 ~ 18:00
-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세미나실(20층)
- ◆ 참 석 : 총 10명 (위촉직 9명, 당연직 1명)
 - 위촉직(9) : 배보운 위원장, 오동운 부위원장, 도태우, 박유진, 박진영, 이민, 소은영, 조수혜, 채명성
 - 당연직(1) : 인권담당관
- ※ 배석: 인권정책팀장, 인권보호팀장, 인권협력팀장, 시민인권보호관 등 관계 공무원
- ◆ 안건
 - '23년 인권포럼 결과보고
 - '23년 인권 실태조사(5건) 최종보고 및 자문
 - 정책개선 권고(안) 심의

○ ○ ○ ○ 부위원장 : 인권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오실 때까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3건입니다. 2023년 인권포럼 결과보고, 2023년 인권 실태조사 최종보고 및 자문 그리고 정책개선 권고(안) 심의 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지난 10월 25일에 진행된 인권포럼 결과를 관계 공무원께서 보고해주시겠습니다.

○ 관계 공무원

-보고사항 자료갈음

○ ○ ○ ○ 부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포럼행사 당일 분위기가 참 좋았고 성황리에 끝났다고 하시니까 포럼을 준비한

위원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포럼이 의외로 음으로 양으로 반영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 ○○○ 위원 : 인권위원회에서 자살에 대한 주제를 다룬 것이 매우 시의적절 했던 것 같고요. 다들 약간 편한 마음으로 왔다가 매우 각성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표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날 포럼에서는 굉장히 의미있는 정보들을 서로 많이 얻어갔던 시간이었습니다.

○ ○○○ 부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시의 적절하게 주제를 잘 정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자살에 대해서 논의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포럼이 성황리에 잘 끝나서 관련 직원들한테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안건 1은 이것으로 마치고, 안건 2를 논의하기에 앞서 기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전국광역시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회의결과 보고’라고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다녀오셨는데 짧게나마 현장에서 느끼셨던 것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10월초에 광주에서 열렸던 전국광역시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에 참가해서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의 발표 의제가 사회복지 분야였습니다. 과연 사회복지와 인권에 관한 심층적인 토론도 이뤄졌었고 각 지역별로 어떤 현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때 발제를 맡으신 광주대 ○○○ 교수님께서 주거부터 시작해서 온갖 불평등과 청년들의 경제교육까지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다뤄주셨습니다.

○ ○○○ 부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자료 5페이지 두 번째 안건으로 인권실태조사 최종보고 및 자문 건입니다. 실태조사가 총 5건이었는데 우리 인권위원들도 두 명씩 매칭이 돼서 참여를 했고 관련자들 많이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 보호관님께서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 시민인권보호관(○○○) :

-보고내용 자료갈음-

- ○○○ 부위원장 : ○○○ 보호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조례개정안 현행안하고 개정안을 나뉘는데 7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인권 보호·증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것도 근무여건에 포함시키기는 하는데 근무여건은 물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분리시킨다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결국 인권보호 증진의 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드러내주는 것이 8조 개정안입니다. 8조 개정안에 보면 종사자 인권침해 관호 안에 ‘직장 내 괴롭힘 포함’ 예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조도 8조처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포함한 인권보호 증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시민인권보호관(○○○)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 ○○○ 부위원장 : ○○○ 위원님께서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을 잘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0페이지에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설립이 필요하고 아직까지는 아무런 조직이 없습니까?
- 시민인권보호관(○○○) : 지금 법안이 발의되었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먼저 권익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인천 쪽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런 권익지원센터가 있으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서비스를 받으시고 사회복지활동을 하면서 연대감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순기능들이 많겠네요.
- 시민인권보호관(○○○) :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 각 실태조사별로 인권위원회 논의사항이 있는데 권고사항과 부서 자체 정책개선으로 인권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고 개선안이 있습니다. 향후 각 부서나 실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와 부서개선 내용을 확정하면 해당 내용으로 권고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고려하여 적절히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권고사항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매뉴얼을 마련해서 모델을 수행해
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매뉴얼의 내용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
지에 관해서는 전혀 가이드가 없거든요?

○ 시민인권보호관(○○○) :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차별받지 않고 휴
식을 취할 권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침을 만들어라, 권고문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 ○○○ 위원 :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모임을 하라
든지 아니면 장애인은 비장애인하고는 업무처리 능력이 좀 다르니까 어느 정도
업무를 적게 주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중증장애인
일 때 업무량을 비장애인 기준 몇%를 넘지 못한다, 예를 들면 90%를 초과할 수
없다든가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데는 어디든지 되어 있는 게 맞
는 거죠. 장애인을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데로 한정해서 보내기보다 장애인을 채
용하면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더라도 예산을 따서 시설을 마련하도록 한다든
가 해서 결국 장애인이 어디를 가더라도 근무할 수 있어야 그게 이상적인 거니까
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시민인권보호관(○○○) :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기업담당관에서도 이런 매뉴얼에
대한 레퍼런스를 찾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 장애인공
무원 매뉴얼이 있고 인사혁신처라든가 공공기관 장애인 인사관리 매뉴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참조해서 가이드라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논
의는 추후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경증에 비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을 중점으로
컨설팅을 받고, 시설 개선은 예산이 투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시정하기
어렵더라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향후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고 할 예
정입니다.

- ○○○ 위원 :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안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요구하는 겁니까?
- 시민인권보호관(○○○) : 저희가 BF컨설팅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편의시설의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도출하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각각 기관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 위원 : 업무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대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 실제적인 내용이 됩니까?
- 시민인권보호관(○○○) : 설문조사의 업무량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의 주관적인 입장을 응답하신 거고요. 장애인에게 얼마만큼의 업무를 줘야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채용에 응시했을 때 그 직무가 본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응시한 것인데, 그 업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합리적인지, 업무를 부여할 때 장애를 고려했는지 등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업무량을 90%, 80% 이렇게 정량적으로 할 수 없고 장애의 유형이라든가 장애 경증여부라든가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 위원 : ○○○ 위원님, 동일한 업무를 맡는 경우에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어떤 비율을 두는 것이 맞습니까?
- ○○○ 위원 : 참 쉽지가 않은 문제라서. 결국은 과도기적으로는 좀 우호적인 차별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시민인권보호관(○○○) : 적극적 우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장애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공간, 함께 일하는 동료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출연기관에서 장애인 직원 대상의 별도 인사 관련 매뉴얼이 없다보니 비장애인과 똑같이 인사를 관리하고 있어서 장애 유형이라든가 장애특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인사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를 개선방안에 넣

게 되었습니다.

- 인권담당관 : 이 자리에서 권고사항 중 특별한 부분을 우선 논의하고, 내년에 권고안을 작성하면서 그때 다시 논의하고, 미흡하다면 보완을 해서 발표하고, 최종적으로 각 실국에 전달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 부위원장 : ○○○ 보호관님께서 논의사항까지 다 지적해서 적어 주셨는데 더 논의하실 것이 없으십니까?
- ○○○ 위원 : 보호관님 의견도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같은 경우 소관부서 출석여부도 그렇고 2-3도 소관부서 출석요구 저희가 논의를 해서 오늘 결정해야 합니까?
- 시민인권보호관(○○○) : 소관부서가 와서 인권위원님들의 권고 의견을 들으시고 소관부서 입장도 말하는 것이 이후 권고이행과 관련해서 더 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제 생각에 다음 회의 안건으로 권고가 상정되면 소관부서 참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 위원 : 네, 타당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부서의견을 듣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 권고 이행관련해서 출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부위원장 : 좋은 의견이십니다. 우리가 논의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서에서 오셔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있고 권고의 개선방안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 보호관님, 빠진 내용이나 위원님들한테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 시민인권보호관(○○○) : 저희 권고사항하고 소관부서 자체 자율적 개선사항과 관련해서 논의 해주시면 그와 관련해서 권고문 초안을 마련하고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 ○○○ 부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께서 별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자료에 있는 권고사항대로 권고하는 바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보호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부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님께서 인권 실태조사 2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 시민인권보호관(○○○) :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인권 실태조사와 서울시립병원 보건의료업무 종사자 인권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자료갈음-

○ ○○○ 부위원장 : ○○○ 보호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자료 18쪽하고 21쪽 하단에 인권위원회 논의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이나 자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18쪽에 인권위 논의사항에서 권고사항이 번호로는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는 많이 여러 개 적어놨습니다. 부서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 그 중에서 굉장히 굵직하고 심각하다, 인권침해 요인이 많다는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부서자체 개선으로 떨어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 ○○○ 부위원장 :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너무 나열되어 있으니까 집중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 ○○○ 위원 : 저도 그 부분에 같은 생각인데, 특히 맞춤형 식단의 경우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 맞춤형식단의 여러가지 경우들이 있고, 식단 자체도 구체적인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권고보다는 자체개선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위원 : 보호관님께서서는 지금 이 열거한 것 중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

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요?

- 시민인권보호관(○○○) : 일단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이나 요구도를 봤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야간시간대 간호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설에서 야간에 요양보호사분들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호 인력들의 인건비나 근무조건이 요양보호사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에 부담이 가고 법적으로도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인력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대부분 요양보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와 논의하였을 때 이런 상황에서 권고가 나가면 오히려 요양보호사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권고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시범사업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빠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장기근속 장려금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서 자체 개선사항으로 돌릴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용자생활환경개선 인권보호증진은 낙상사고 CCTV 권고사항이고, 그리고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증진은 지침매뉴얼, 이용자 보호자 교육 그리고 앞에 노동조건은 노인요양보호사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종사자의 급여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의 예산으로 운영되어서 서울시 소관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고 그나마도 제한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로 많은 문제들이 나왔더라도 6개, 7개 정도를 뺐는데도 내용이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면 그 부분은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지금 권고사항에 넣겠다는 것이 요양보호사실 그 다음에 지침매뉴얼 그다음에 낙상사고, CCTV 이렇게 4가지인가요?

- 시민인권보호관(○○○) : 네, 그리고 이용자보호자 교육까지 다섯 가지입니다.

- ○○○ 부위원장 : 논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제한이라는 것은 말로는 쉬운 말로 되어 있지만, 뭔가 도구를 이용해서 누군가의 인권을 억압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

리를 듣고 저희에게 전할 말씀은 없습니까?

- 시민인권보호관(○○○) : 신체제한을 하는 몇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인력 부족입니다. 적은 요양보호사 분들이 많은 이용자분들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력부족 문제로 편의상의 이유로 신체제한을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매번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것도 연락을 해도 잘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최초 시설입소 시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것을 근거로 신체제한을 풀기 위한 노력이나 조치 없이 계속 신체제한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신체를 억제하기 전까지 많은 의견 수렴 및 결정사항들을 포함시키고, 실제로 신체를 억압했을 때도 그것을 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놓으면 신체제한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네. 신체제한의 절차나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 하면 인권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낙상사고랑 신체제한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실 노인들이 요양시설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신체제한의 문제거든요. 둘 다 중대한 부분이라 가능하면 낙상사고, 신체제한 둘 다 권고대상으로 검토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둘 중의 하나만 해야 한다면 낙상사고의 경우 병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서. 만약 신체제한 실행지침이 마련이 된다면 보호대상노인들도 예측 가능해지고,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부분은 인권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체제한 부분은 권고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부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인권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셨더라도 추가적인 자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간담회 시간을 활용해서 각 실태조사 담당 인권위원님 또는 담당 보호관에게 말씀해주시거나 추후 인권담당관 부서로 연락하셔서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으로 정책개선 권고(안) 심의입니다. 이민 위원님께서 서

울특별시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 아동인권보호 및 인권환경개선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안을 제안 설명 해주시겠습니다.

- ○○○ 위원 : 서울특별시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 아동 인권보호 및 인권환경개선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안)이고요.

지난번에 조사보고 했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결국 보호대상 아동의 기본권과 보육자의 교육권이 충돌 관계에 있는 부분이라서 균형 잡힌 서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안에 있었던 침해라든지 학대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가급적이면 자제해서 균형 잡힌 서술을 할 수 있도록 ○○○ 위원님과 같이 자문했습니다.

지난번 인권위원회에서 ○○○ 위원님이 말씀했던 내용인데, 경제 관련 체계를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신탁통장의 실제 운영사례를 말씀해주셔서 그 부분도 괄호안의 예시로 넣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저축통장이나 적금통장의 경우에는 보육하는 선생님들이 관리하다보니까 아동들이 통장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우리가 신뢰한다 하더라도 통장관리를 선생님이 하다보니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는 견제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신탁통장은 학생이 일정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적은 용돈이라도 그게 쌓이면 자립할 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퍼센트를 신탁통장에 넣는다든지 식의 절충안도 검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고안의 주문 부분은 제가 낭독을 하고, 권고이유는 이미 여러 번 체크가 된 부분들이고, 조금 더 논의한 다음에 권고이행을 담당하시는 소관부서 관계공무원님이 제가 하고 나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자료갈음-

- ○○○ 부위원장 : 이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팀장 ○○○께서 권고안 관련하여 부서의견이나 설명하실 내용

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 : ○○○○팀장 ○○○입니다.

조사 내용 중 1번 항의 생존권 관련해서 ADHD아동 및 경계성 지능아동이 다수이기 때문에 종사자 간 아동비율에 대한 시범사업이라든지 종사자를 늘리는 부분은 중앙정부의 기준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도 공감하고 적극 수용합니다.

2번항 같은 경우에, ‘자립준비체계 및 프로그램 팔호 열고 용돈 등에 대한 신탁통장을 개설하는 부분, 경제교육 등’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앙정부사업에서 재원부분만 이양되고 정책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사업 안내 책자에 이 부분이 언급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언급되어 있느냐 하면, ‘아동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은 아동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시설에서 위임 관리하는 성격’으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사자가 아동의 개인금전을 유용할까봐 이런 부분이 들어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니면 그것보다는 현재 실태조사 결과에 보면 아동이 통장 등을 ‘모른다’는 답변이 많아서 이렇게 하신 것도 같습니다. 현재 디딤씨앗통장은 적립개념으로 후원금하고 정부지원금을 합쳐서 목돈이 됐을 때 찾을 수 있는 약간의 신탁개념입니다. 그래서 디딤씨앗통장에 모인 돈○츠로 자립하는 용도에 한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아동의 경우 개인 통장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학습비, 의료비, 치료비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신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사용할 때 시설에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신탁이라는 개념은 사실 제3자한테 개인이 아니라 통장이 가 있는 상태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동양육 수당 수령은 아동 통장으로 개설하게 되어 있고, 시설명의 통장에서 그 아동수당 금액을 이체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동들이 통장개념을 모른다고 하지만 그것을 종사자나 시설에서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 구청에서 지도점검 권한이 있어서 회계부분은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용하거나 이렇게 종사자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들이 여기 설문조사 했을 때 통장에 대해 모른다고 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통장을 갖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 ○○○ 위원 : 조금 전에 디딤씨앗통장은 신탁통장과 유사하게 이용된다고 했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 또 어느 단계에 지급되는 건지 또, 그게 뭐가 부족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신탁통장(안)이 나왔는지 배경을 설명해주셔야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관계공무원 : 아이들에게 들어오는 후원금에다가 1대2로 해서 정부지원금을 매칭하는 성격으로 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지금 묶여 있어서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보호 종료가 되고 시설에서 나갈 때 인출해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관계공무원 :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지정후원이라고 해서 그 아이가 시설에 들어오면 거기에 후원하시는 분이 나는 이 아이한테 언제까지 후원을 하고 싶다, 그게 지정후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립준비청년 사업은 법이 강화돼서 추진하는 것이 활성화 단계에 있는데 그 금액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정부지원금보다 상향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마다 약간씩 다를 겁니다.

○ ○○○ 위원 :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님이 전 회의에 오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그동안 인권위원님들과도 논의를 해서 얘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권고안이 오늘 확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권고안 자체를 지금 바로 수정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권고안이 용돈 등에 대한 신탁통장 개설을 100% 하라는 이런 형태의

권고가 아니라 신탁통장 등을 일부 활용해서 용돈전체 아니면 10%, 20%를 활용함으로써 경제관념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나름대로 자립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2024년 이행 보고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보호대상 아동이 실제로 독립했을 때 본인이 경제적인 자립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실제적인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이 권고(안)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다음에 보고하실 때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또 이 부분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 관계공무원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아동부분은 이해가 되신 것 같은데, 자립준비 청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성년이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관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려면 본인이 경제활동을 체험하고, 연습하고,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신탁한다면 사용이 어려울 것 같아요.

○ ○○○ 위원 : 100% 신탁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 ○○○ 위원 : 지금 위원님의 취지는 그 앞 부분 서울형 자립 준비체계 및 프로그램을 내실화 하자는 것이고 지금 그러면 실질적인 자립에 필요한 돈이 신탁형태든 제대로 관리가 돼서 자립이 내실화 되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지요.

다만, 용돈에 대해서 신탁통장이라니까 조금 진의가 왜곡돼 보이는 것 같은데, 용돈은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하고 자립 준비사항으로 실질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의사를 괄호에서 약간 표시를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관계공무원 : 저는 아동의 경우 경제관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에서 지금처럼 운영해야 될 것 같고,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부터 경제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립에 임박한 아이들은 거의 용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

이 쓰고 나가기 전에 경제교육 등 자립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그런 취지에서 온 겁니다.

- ○○○ 위원 : 혹시 ○○○ 보호관님,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인권보호관(○○○) : ○○○ 위원님하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 예시로 신탁통장 개설이라든가 경제교육의 효과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라 지금 정책 추진 사항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예시까지 권고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자립준비를 할 수 있는 서울형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권고해서 해당부서에서 그에 맞는 세부사업을 기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도 괄호안의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이 부분만 빼면 될 거 같아요. 자립준비 교육은 필요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이 없을 텐데요.
- ○○○ 위원 : 이 부분은 굳이 주문에 안 들어가도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본문에 해당내용이 있으면 ‘용돈 등에 대한’ 이 부분은 빼도 되겠네요.
- ○○○ 위원 :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빼시지요.
- ○○○ 부위원장 : 좀 더 넓은 의미로 신탁통장 관련해서 하나 문장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용돈 등에 대한 신탁통장개설’ 부분은 빼는 것으로 해서 의결이 가능합니까?
- ○○○ 위원 :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문에서는 괄호부분은 빼고 그리고 본문 부분 27페이지에 ‘경제교육을 포함하여 용돈 등에 대한 부분’을 빼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줄이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폭넓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자립준비금 내실화’ 뭐 이렇게 해서 일단 그걸 빼는 것으로,
- ○○○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항 후단 하단 부분은 ‘서울형 자립준비 체계 및 프로그램 괄호’는 삭제 그리고 ‘내실화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 위원 : 좋은 의견입니다.
- 시민인권보호관(○○○) : 그러면 주문에서 괄호를 삭제하고 27페이지에 있는 ‘용돈 등에 대한 신탁통장 개설’ 그리고 28페이지에 있는 ‘경제교육 추진 및 용돈 등에 대한 신탁통장 개설’이라는 문구를 권고문 안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아까 정리한 것은 27페이지 ‘용돈 등에 대한’ 부분만 본문에서 삭제입니다. 28페이지에도 ‘용돈 등에 대한’ 이 부분만 삭제입니다. 이게 ○○○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이고 실제로 신탁통장을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를 지난 회의 때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방어가 굉장히 어렵네요.
- ○○○ 위원 :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일단 빼시지요.
- ○○○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용돈 등에 대한 신탁통장 개설부분은 27페이지와 28페이지에도 있는데,
- 보호관(○○○) : 28페이지는 ‘경제교육 추진 및 용돈 등에 대한 신탁통장 개설’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 ○○○ 위원 : 경제교육은 나눠도 되지 않나요.
- ○○○ 위원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제 교육을 포함하여 서울형자립 준비체계의 실효적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 시민인권보호관(○○○) : 그러면 ‘보호대상에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교육 추진 등 서울형 자립준비 체계의 내실화 방안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부위원장 : 그러면 오늘 의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1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수정된 권고안에 대해서 의결하했는데 서울특별시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 인권보호 및 인권환경개선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를 일부수정 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 위원 : 저는 인권위가 꼭 이 문제는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감사위원회 소속이고, 서울시 감사위원회 산하에 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가 다 들어있습니다. 인권이란 가치를 보편적 가치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따지려면 독립기구로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행정감사 시간 때 언급했듯이 완전한 독립기구로써 인권위원회가 존재해야 하고 인권담당관 역시도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오로지 인권적 가치로만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 ○○○ 위원 : ○○○ 위원님께서 시의회 위원으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지점을 짚으신 것 같습니다.
- ○○○ 위원 :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취지에 공감을 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 위원 : 인권위원회 명의로 권고(안)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 위원 : 저도 사실은 그런 권고(안)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싶은데 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조직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다른 시, 아니면 외국의 다른 시들이 있을 텐데 인권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저희가 먼저 조사를 하고 연구하고 토론한 이후에 사실 권고안을 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 위원 : 네, 동의합니다.
- ○○○ 위원 : 네. 그 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먼저 필

요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의견을 낸 것은 향후 이런 내용을 숙고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내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32페이지 참고자료2는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식 행사 안내인데 제가 내일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인권위원회 정기회는 내년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한번 보시고 2월 22일 또는 29일 중에 가능하신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2일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 : 그러면 2월 22일 목요일 오후 3시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서울시 인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00분 회의종료】